

# 농림축산

## 농·축산업

### ■ 개요

1975년 당시 농가인구는 1천324만 명으로 전체 인구 대비 비중은 37.5%나 됐다. 그런데 39년이 지난 2014년 현재 인구는 275만 명으로 5분의 1(20.7%) 수준으로 격감했다.

2014년 기준 평균 농가소득은 3천495만원이며 이 가운데 농업소득은 1천30만3천원으로 29.5%에 불과했다. 이에 비해 실질 농가부채는 14만원(1975년)에서 916만원(1990년), 2천787만원(2014년)으로 기하급수적인 증가세를 보였다.

도농 간 소득 비율은 1975에는 해도 111.1%로 농촌이 오히려 높았지만, 1990년 97.4%로 떨어졌고 이어 2010년 76.7%까지 조금씩 내려앉았다가 상승하는 추세다.

외국산 농축산물 수입이 급증하면서 농축산물 가격은 내려갔지만 비료와 농약, 농기계, 인건비 등 영농비는 오른 것이 주 원인이다.

농경지 면적은 매년 서울 여의도면적의 17배인 1만5천ha씩 도로건설 등으로 전용되다 보니 1990년까지만 해도 210만9천ha에 달했는데 2014년 말 169만1천ha로 줄었다. 한국의 농경지면적은 미국의 1억7천345만ha, 중국의 1억4천262만ha와 비교할 때 100분의 1배를 넘나든다.

농가가구 당 경지면적은 1.56ha로 미국 82.5ha의 1.89%에 불과하고 일본 1.6ha보다도 약간 좁다. 게다가 농지면적이 1ha도 되지 않는 영세소농과 65세 이상 농가가 절반이 넘는 정도로 영세·고령농의 비중이 높다.

쌀시장 전면개방 등에 맞서 생산비 절감과 경쟁력 제고 노력이 절실하지만 이러한 열악한 농촌 환경 탓에 한계가 있다.

식량자급률도 초라하다. 2014년 기준으로 식량자급률은 49.8%에 달하지만 사료용을 포함한 전체 곡물자급률은 24.0%에 그치고 있다.

곡물자급률의 경우 이웃 일본은 30.7%며 미국 129.4%, 캐나다 143.5%, 프랑스 190.6%, 독일 116.4%, 스위스 205.6%로 비교가 되지 않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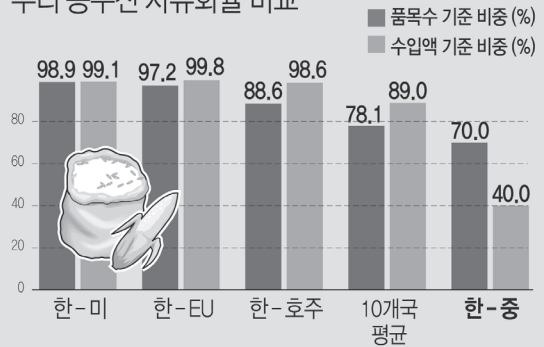
### ■ 한·중 FTA 체결...농축산어업에 큰 영향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이 발효됐다. 이로써 양국은 최장 20년 이내에 전체 품목의 90% 이상에 대한 관세를 단계적으로 철폐하게 된다. 품목 수 기준으로 중국은 전체 90.7%인 7천428개, 한국은 전체 92.2%인 1만천272개의 관세를 없애 나간다.

수입액 기준으로는 중국은 대 한국 수입액의 85.0%(1천417억 달러)에 부과되는 관세를 철폐하고 한국 측은 91.2%(736억 달러)에 세금을 매기지 않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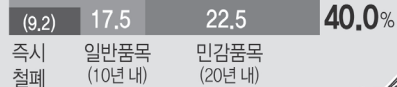
한국은 중국과 협상 때 민감한 분야인 농수축산물, 영세 중소기업 분야를 보호하는 데 주력했다. 대중 수입액의 60%에 달하는 국내 농수산물 및 섬유, 베어링, 판유리, 합판 등 영세

### 우리 농수산물 자유화율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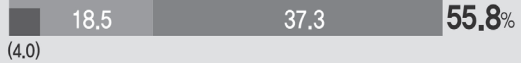


### 한·중 FTA 농수산물 양허 수입액 비중

한국 양허(對 중국 수입액)



중국 양허(對 한국 수입액)



자료/산업통상자원부

연립뉴스

업체의 생산 품목을 관세 철폐 대상에서 제외했다.

발효 즉시 중국 측 관세가 철폐되는 품목은 958개(수출액 기준 연간 87억 달러)다. 우리나라는 발효 즉시 80억 달러에 달하는 시장을 개방한다. 또한 해마다 단계적으로 관세가 내려가며 10년 내에 5천846개(1천105억 달러)의 품목에 대한 중국 측 관세가 철폐된다.

한국은 한·중 FTA 타결 과정에서 농수산물 시장 개방을 최소화했다. 자동차와 반도체 등 제조업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취약한 농수산물 분야에서는 추가 개방의무를 지지 않는 양허 제외 지위를 최대한 확보했다.

중국에서 수입하는 농수산물 가운데 수입액 기준 60%를 일정기간 후 무관세화하는 관세철폐 대상에서 제외했고 그 중 절반에 해당하는 30%에 대해 양허 제외 지위를 확보했다.

한·중 FTA의 양허 제외 대상 농수산물은 548개로 한·미 FTA(16개), 한·EU FTA(41개), 한·호주 FTA(158개), 한·캐나다 FTA(211개) 보다 훨씬 많다.

쌀을 비롯해 고추, 마늘, 양파, 사과, 감귤, 딸기, 수박, 복숭아, 배, 조기, 갈치, 쇠고기, 돼지고기 등 주요 농수산물이 양허 대상에서 빠졌다.

간장·된장·고추장·매주 등 전통식품과 국내 생산기반 유지가 필요한 식품용 대두유·설탕·전분 등 가공식품도 양허대상에 들어가지 않았다.

중국의 수입 관세 개방폭이 한국보다 높아 우리 농수산물의 중국 내수 시장 진출에 박차를 가할 기회라는 기대가 크다.

중국은 20년 내에 전체 농수산물 중 품목 기준 92.8%, 수입액의 55.8%를 개방하기로 했다. 특히 중국 수산물 시장은 품목 수 기준 자유화율 99%로 거의 모두 개방된다. 초민감 품목을 포함해 우리나라가 중국에 수출하는 모든 수산물에 대해 20년

이내에 관세가 모두 없어진다.

그러나 그동안 관세 인하가 없어도 해마다 값싼 중국 농수산물 수입은 급증해왔으며 이를 고려할 때 FTA를 발판으로 중국 농수산물이 대량으로 들어와 국내 농수산업이 막대한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한·중 양국 무역에서 우리나라가 줄곧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했으나 유독 농수산업은 일방적으로 적자를 보고 있다. 이 때문에 FTA 발효로 중국 농수산물에 대한 개방 폭이 넓어지면 그에 따른 농산물 무역수지 적자규모가 더욱 커질 가능성이 있다.

대부분 신선 농산물은 관세 철폐 대상에서 빠졌지만, 20년 이내에 관세가 철폐되는 농축수산물 품목이 전체의 64%에 이르고, 현행 관세율 20%가 18%로 낮아져 중국산 김치의 수입가격이 더욱 내려갈 전망이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등 6개 연구기관이 발표한 FTA 영향평가 결과를 보면 한·중 FTA 발효 후 20년간 농림업과 수산업은 각각 연평균 생산이 77억원, 104억원 감소할 전망이다.

20년간 예상되는 농림·수산업 분야 피해액은 농림업 1천540억원, 수산업 2천80억원 등 총 3천620억원이다.

쌀 등 주요 농산물이 양허 대상에서 제외됐으나 일부 재배업 품목과 가공 농산물 수입 증가로 농림업 분야는 연평균 750만 달러 규모의 교역수지 악화가 예상된다.

특히 발농업 채소류와 인삼·버섯 등 특약작물과 임산물을 중심으로 생산이 감소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또 어류·갑각류 수입이 늘어 수산업 분야도 FTA 발효 후 20년간 교역수지가 930만 달러 악화하고, 바지락·홍합 등 패류, 새우 등 갑각류를 중심으로 생산이 줄어든다.

농업계에서는 한·중 FTA가 국내 농수산업 생산 기반을 위협할 것으로 우려한다.

조병옥 전국농민회총연맹 사무총장은 “중국은 우리나라와 작기(作期)가 비슷하고 거리가 가까워 한·중 FTA는 다른 어떤 FTA보다도 농업에 치명적인 타격을 줄 수 있다”며 “신선 채소도 위험한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한민수 한국농업경영인중앙회 정책조정실장도 “중국이 2000년 세계무역기구(WTO)에 가입한 이후 누적된 국내 농업 피해액도 이미 많은데 이러한 정황을 제대로 고려하지 않고



▲ 김진필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장(오른쪽 두 번째)이 10월 26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진행된 한·중 FTA 보완대책에 관한 공청회에서 의견을 진술하고 있다.

정부와 국회가 한·중 FTA 대책을 논의해 실망할 수밖에 없었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FTA로 생산 감소가 예상되는 발농업과 임업 등 취약산업을 중심으로 시장 개방에 따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재정 지원을 한다는 계획이다.

2025년까지 주요 20개 발작물 주산지에 발 공동경영체 100개소를 육성하는 한편 2014년 56%였던 발 기계화율을 85%까지 끌어올리는 등 발농업 경쟁 강화에 1천65억원을 투입한다.

어업 분야에서는 어업인 소득·경영 개선에 674억원, 친환경 양식 직불제 도입 등 어선·양식어업 지원에 1천573억원을 지원한다.

또 시장 여건, 기상 상황 등으로 농수산물 가격이 하락하거나 생산량이 줄어도 농가 수입을 일정 수준으로 유지하도록 보장하는 수입보장보험을 도입한다.

애초 한·중 FTA 체결로 이득을 보는 산업의 이득 일부를 농수산물 등 피해산업에 지원하는 방안이 논의됐다가 정부와 재계의 반대로 수면 아래로 가라앉고 여·야·정 협의체는 1조원 규모의 상생기금 조성에 합의했다.

1조원 기금과 더불어 정부가 금리 인하, 세제 지원 등으로 농어업 분야에 지원하는 2조800억원을 합쳐 앞으로 10년간 농어촌 FTA 피해 지원에 모두 3조원이 투입된다.

## ■ 쌀 과잉공급…국산쌀 첫 중국 수출길

그동안 까다로운 검역 조건 때문에 중국 수출이 막혀 있었던 국산 쌀이 처음으로 중국으로 수출할 수 있게 됐다.

2015년 한·중 실무협의를 거쳐 2016년 1월 29일 군산항에서 이동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중국 수출용 쌀 가공공장 6개소와 합동으로 중국으로의 수출을 위해 한국 쌀을 첫 선적했다.

2015년 10월 한·중 정상회담을 계기로 양국이 쌀 검역 요건에 합의해 정부가 2009년 중국에 한국산 쌀 수입을 요청한 지 7년 만에 중국 수출길이 열렸다.

우리나라가 중국으로의 쌀 수출에 심혈을 기울이는 이유는 식습관 변화로 쌀 소비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면서 재고가 급증하기 때문이다.

2015년 벼 재배면적이 2014년보다 2% 줄었지만 날씨가 좋고 병충해·태풍 등의 피해가 없어 단위면적(10a)당 생산량이 520kg에서 533kg로 2.5% 늘어 2015년도 풍년이었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통계청에 따르면 2015년 쌀 생산량은 2014년(424만8천)보다 0.4% 증가한 425만8천이었다.

쌀 생산량은 10년 전인 2005년(476만8천)과 비교하면 10.7% 줄었다. 농지를 택지로 개발하고 벼 대신 다른 작물을 재배하는 방법으로 매년 벼 재배면적을 줄여 쌀 생산량도 줄어드는 추세다.

그러나 쌀 소비가 더 큰 폭으로 감소해 2014년 1인당 쌀소비는 65.1kg로 2005년(80.7kg)보다 19.3% 줄었다. 쌀 재고 누적이 지속되는 이유다.

2014년까지 관세화 유예로 인해 쌀 의무 수입물량이 매년 증가해온 것도 쌀 재고를 늘린 요인이다. 이로 인해 2014년 의무수입물량은 40만8천700t까지 늘었고 이 가운데 밥쌀용은

30%인 12만2천6000에 달했다.

밥쌀용 수입을 놓고 농민들이 반발했다. 관세화로 전환되면서 수입쌀 용도 규정이 삭제됐지만 정부의 밥쌀용을 수입했기 때문이다.

한편 쌀 재고가 쌓일수록 쌀 보관 비용 등 재고 관리 부담도 커진다. 이 쌀은 전국 양곡창고 3천900곳에 나눠 보관된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쌀 재고 10만 보관에 연간 316억원이 들 것으로 추정했다. 이는 10만당 보관료 6억원, 고미화(古米化)에 따른 가치하락 비용 220억원, 금융비용 35억원을 합친 것이다.

이런 탓에 정부는 남아도는 쌀을 활용할 수요처를 발굴하는데 힘쓰고 있다. 현재 정부는 쌀 가공산업 육성과 수출 활성화에 주력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2014년 호주·일본·홍콩 등 45개국에 쌀 1천 992, 471만5천 달러어치를 수출했다. 세계 경기침체 등의 여파로 2014년 쌀 수출액은 2010년(651만9천 달러)보다 28% 줄었다.

아울러 2015년 한·중 정상회담을 계기로 양국이 쌀 검역 요건에 합의하면서 쌀을 중국으로 수출할 길도 열렸다.

쌀 대북 지원이나 해외 무상 원조를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지만 현재로서는 실현 여부가 불투명하다.

### ■ 3·11 첫 전국동시조합장선거

2015년 3월 11일 처음으로 전국동시조합장선거가 치러졌다.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선거관리위원회가 농·수협 및 산림조합으로부터 위탁을 받아 전국적으로 실시한 첫 번째 선거였다.

이 선거로 1천326개 조합(농협 1천15개·수협 82개·산림조합 129개)에서 새 조합장이 뽑혔다.

이런 전국동시조합장선거는 합동연설회나 관련토론회, 정견발표 등이 허용되지 않았을 뿐더러 선거운동 기간도 후보자 등록 후 13일로 제한돼 불만이 제기되기도 했다.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통해 농협 개혁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돼 이전보다 많은 수의 조합장이 교체되기도 했다.

부정선거 가능성도 제기됐으며 '깜깜이 선거'였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를 계기로 농협중앙회장 선거를 현행 간선제에서 조합장 직선제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도 고개를 들었다.

### ■ 장마 없는 여름···40년만의 최악의 가뭄

극심한 가뭄이 한반도 전역에서 기승을 부렸다. 상당수 저수지가 바닥을 드러냈고 댐 수위가 급격히 낮아졌다. 2016년 농사를 걱정하는 농심은 새까맣게 타들어갔다. 일부 지역은 식수조차 모자라 제한급수를 해야 했다.

2015년은 연중 내내 전국이 물 부족에 시달렸다. 중부 지방이 가장 심각했다. 가뭄은 여름에 이어 가을까지 이어졌다.

기상청의 자료를 보면 1월 1일부터 10월 27일까지 전국의 누적 강수량은 779.7mm로 평년(30년 평균치·1천231.5mm)의 63% 수준에 그쳤다. 지역별로는 서울·경기(564.1mm)가 평년의 45%에 불과해 가장 낮았다.

2015년 가뭄은 여름에 비가 적었던 게 가장 큰 원인이다. 장마 기간(6월 말~7월 말) 전국 평균 강수량(239.8mm)은 평년(356.1mm)의 67%였다.

여름철 초반에는 장마전선이 주로 우리나라 남쪽에 있었다. 이후 연달아 접근한 태풍의 영향으로 장마전선이 활성화되지 못해 비가 적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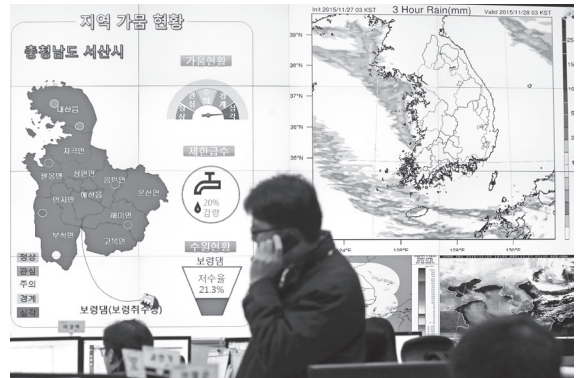
이후 제9호 태풍 찬홈과 장마전선의 영향으로 제주도와 남해안, 중부 지방에 비가 내렸고 대기 불안정으로 소나기가 종종 찾아왔다. 그러나 해갈에는 턱없이 부족한 수량이었다.

7~9월에 한반도에 영향을 주는 강한 태풍이 올해는 오지 않은 것도 가뭄 현상 악화의 요인이다.

봄부터 이어진 극심한 가뭄 탓에 모내기조차 어려웠던 강화도 농민들은 유례없는 가뭄에 바닷물까지 올라와 벼가 말라 죽는 등 염해까지 겹쳐 큰 어려움을 겪었다.

서산 B지구 간척지 임대농민들도 오랜 가뭄에 염분농도가 증가하면서 적게는 30%, 많게는 100% 벼가 말라죽거나 품질이 크게 하락하는 피해를 입었다.

일부 지역에서는 참깨·들깨·콩 등이 여물지 못한 채 썩지만 남는 등 농작물 피해가 잇따랐다. 충남 서북부와 충북 단양 등 일부 지역은 농업용수는 물론 생활용수마저 부족해 제한 급수에 돌입하기도 했다.



▲ 가뭄 관련 정보를 분석해 국가 및 관련 기관의 정책결정에 필요한 통합 물 정보를 제공하는 가뭄정보분석센터가 11월 27일 대전 수자원공사에서 문을 열었다. 관계자들이 전국 수자원 정보를 살펴보고 있다.

농식품부는 12월 1일 4대강 물 활용방안을 포함한 '농업·농촌 가뭄대응 종합대책'을 내놨고 지자체들도 종합대책상황실을 운영하는 등 상시적인 가뭄대응체계 마련에 분주했다.

이 대책의 골자는 가뭄이 발생한 뒤 사후 '응급 복구' 중심이었던 정부의 가뭄 대응 전략을 '상시 체계'로 바꾸고 4대강 하천수를 가뭄에 활용한다는 것이다.

농식품부는 상시적으로 가뭄을 예측해 피해를 줄이고자 '농업가뭄지도'를 격주로 제작, 발표하기로 했다.

가뭄 관련 종사자들이 참고할 수 있도록 저수율, 강우량, 유효토양수분량, 현장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지도를 만든다. 지도에는 각 지역 가뭄 상황이 관심·주의·경계·심각 4개 단계로 표시된다.

농업가뭄지도를 바탕으로 가뭄 발생이 예측되면 농식품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농업가뭄협의회를 열어 가뭄대책상

황실 설치 여부 등을 결정한다.

3개 시·도, 10개 시·군, 5천ha 이상 논·밭이 가뭄 주의 단계가 되면 농식품부에 가뭄대책상황실을 설치하고 경계 단계가 되면 국민안전처에 중앙가뭄대책본부 설치를 요청할 수 있다.

매년 10월 1일 저수지별 저수량과 강수 상황을 점검해 저수율이 낮은 저수지는 강수 예측 시나리오에 따라 준설, 양수 저류, 관정개발 등 지역 실정에 맞게 용수 확보 대책을 펼친다.

가뭄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농업용수 확충과 물 이용 효율 화에도 주력한다. 우선 심각한 가뭄에도 용수 공급이 가능한 논인 수리안전담 비율을 현행 60%에서 80%까지 끌어올리기로 했다.

이를 위해 4대강 하천수를 활용, 4대강 인근 1만2천ha에 이르는 물 부족 농경지에 매년 용수를 1억㎥ 공급할 계획이다. 현재 4대강 하천수를 가뭄에 활용하기 위한 예비타당성 조사 신청을 앞두고 연구 용역을 진행 중이다.

가뭄이 심각한 충남 서부와 경북 북부 지역에 용수 공급이 시급하므로 4대강 보인 공주보·상주보와 저수지(예당지·화달지)를 각각 연결하는 도수로 설치 공사는 올해부터 추진하고 있다.

또 가뭄 우려 지역 내 저수용량 10㎥ 이상, 유역면적 500ha 이상 기존 저수지 물그릇을 키워 저수 용량을 늘린다.

논보다 가뭄에 취약한 밭 용수 공급률은 18%에서 30%까지 높인다. 가뭄 상습지역 밭 15만ha에 용수공급계획을 우선 적용하고 고랭지배추 주산지인 강원 인반덕 지역에 2016년까지 63억원을 투입해 양수장과 저수조를 설치한다.

또 지능형 물관리 자동화사업 확대와 노후 저수지·양수장 개보수 등으로 물 관리손실률을 35%에서 25%로 낮추고, 버려지는 논물을 재활용해 농업용수 반복 이용률을 15%에서 30%로 개선할 예정이다.

이 같은 가뭄 대책을 추진하기 위해 농식품부에 농업가뭄협의회와 농업가뭄센터, 한국농어촌공사에 농업가뭄지원단을 각각 설치하기로 했다.

### ■ 가축질병으로 신음…또 시·구제역

2014년 12월 3일 충북 진천 소재 돼지농장에서 시작된 구제역이 전국으로 퍼져 축산업계가 어려움을 겪었다. 2015년 4월 28일 이후 추가발생은 없었다. 이때까지 총 185건의 구제역이 발생해 17만2천000여 마리의 소·돼지 등 우제류 가축이 매몰 처분 됐다.

이후 농림축산식품부를 중심으로 정부는 구제역 재발 방지에 전력을 기울였다. 구제역 재발 위험성이 높은 기존 발생지역과 구제역 감염항체(NSP 항체) 양성 농장에 구제역 백신을 일제 접종했다.

아울러 전국 16개 시·도 상황실에서 '2015년도 구제역 가상 방역 도상훈련'을 했다. 점검 내용은 ▲의심축 신고 접수에 따른 초동 대응 ▲의심축 확인 후 긴급 대응 ▲백신접종 유형·추가발생 확인에 따른 방역조치 ▲상황진정·이동제한 해제 등이었다.

지자체 등 가축방역 기관의 구제역 초동대응 태세를 점검하고 대응 역량을 강화하려는 취지에서 하는 훈련이었다.



▲ 12월 15일 경기도 파주시 임진각에서 열린 구제역 가상방역 현장 훈련에서 방역당국이 살처분 시연을 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2000년 구제역 발생으로 막혔던 한우고기 수출길이 2015년 15년 만에 뚫렸다. 2015년 11월 한우고기의 홍콩 수출에 필요한 양국 간 검역·위생 협상을 마무리하고 수출을 시작했다.

특히 2015년 발생한 구제역 상황에서는 이전에 국내에서 예방백신으로 접종해 왔던 3가 백신의 백신주 중 하나인 'O1 마니사'와 국내에서 발생한 'O'형 타입의 구제역 바이러스 간 면역학적 상관관계가 낮아 '효능이 없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일명 '물백신'논란이 일기도 했다.

농식품부가 자체 감사를 벌여 최종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이 자리에서 물러나는 등 30여 명이 크고 작은 징계를 받기도 했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의 발생도 연중 내내 이어졌다. 지속적인 발생양상을 보이면서 '상시화·상재화·토착화'의 순을 밟고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됐다.

이례적인 것은 역학조사당국이 2015년에 발생한 조류인플루엔자에 대해 '잔존바이러스에 의한 발병'으로 추정하는 역학 조사결과를 내놓았다는 점이다. 외부에서의 유입만이 아닌 내부 발병 요인을 공개한 것이었다.

이에 따라 방역당국은 가축질병에 대한 방역방식을 '발생 후 처리가 아닌 발생 전 선출로 변경하는 한편 권역대별 방역대를 설정하는 등 강화된 방역정책을 수립했다.

구제역과 시 발생이 상시화하자 농식품부는 2015년 12월 23일부터 시나 구제역 발생지역, 철새근집지 근처 등 가축질병에 취약한 지역을 중점방역관리지구로 지정해 특별관리하는 내용을 골자로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시행에 들어갔다.

중점방역관리지구에 ▲고병원성 시 발생위험이 큰 철새도래지 반경 10km 이내 ▲제종 가축전염병이 최근 5년 이내 2회 이상 발생한 지역 ▲축산농가가 반경 500m 이내에 10호 이상 또는 1km 이내에 20호 이상인 지역이 해당한다.

해당 지구에는 검사·예찰·소독 등 방역조치를 강화해야 하며 지구 내 축산 농가는 울타리나 담장 등 방역 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중점방역관리지구에서 방역시설을 갖추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 과태료, 검사 등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1천만원 이하 과태료 처분을 각각 받는다.

농식품부는 아울러 축산 계열화 사업자의 방역관리 기준을 마련했다. 사업자는 계약 사육농가에 대해 분기별 1회 이상 방역 교육을 하고 방역 기준 준수사항을 점검하도록 했다.

축산 계열화 사업자가 계약 사육농가에 대한 방역관리 의무 미이행, 죽거나 병든 가축 신고 지연, 구제역 예방접종 명령 위반 등으로 방역조치를 위반하면 보상금을 감액한다.

위반 사항별 감액 비율은 방역교육 미이행 5%, 신고 지연 20~60%, 예방접종 명령 위반 40% 등이다.

농식품부는 또 가축 사육시설이 가축 이외의 오염 우려 물품에 대한 격리·역류·이동제한 명령을 위반해도 폐쇄명령이나 가축 사육제한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했다.

## ■ 11월 전국농민대회 개최와 농민 백남기씨 치명상

쌀값 폭락에 대한 항의와 농민 생존권 보장을 요구하며 2015년 11월 14일 서울에서 열린 전국농민대회에 참가했던 농민 백남기(70) 씨가 경찰의 물대포에 맞아 쓰러졌다. 전남 보성에서 상경했던 백 씨는 집회 도중 경찰의 살수 과정에서 뇌를 크게 다쳤다.

백 씨는 서울대병원 중환자실에서 뇌수술을 받았지만 여전히 상태가 위중하다. 이 때문에 2015년 12월 5일 2차 민중총궐기에선 농민과 노동자, 시민 등 5만여 명이 참여해 백 씨의 쾌유를 비는 행사가 열리기도 했다.

백 씨는 1968년 서울 중앙대학교 행정학과 입학 후 1973년 교내에서 유신철폐 시위를 주도해 수배명령이 내려졌고, 약 2년 동안 명동성당에 피신해 생활했다. 1980년 복교했지만 군사정권 비판을 멈추지 않아 계엄군에 체포돼 안양교도소에 수감되기도 했다.

백 씨는 고향인 보성에서 농사를 시작해 1987년 가톨릭농민회 보성 고흥협의회 회장을 지냈고, 가톨릭농민회 전남연합회장(1989~91), 가톨릭농민회 전국 부회장(1992~93) 등을 역임했다. 1992년 우리말살리기운동 광주전남본부 창립에 앞장섰으며 1994년 광주전남본부 공동의장을 지냈다.

백남기대책위는 2016년 1월 14일 오후 서울 종로구 광화문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두 달 동안 누구도 백 씨의 가족에게 사과하지 않고 책임지지 않고 처벌받지 않았다”면서 정부에 공식 사과와 책임자 처벌, 물대포 사용 중단을 요구하고 엄정 수사를 촉구했다.

## ■ 김영란법에 농축산물 선물시장 ‘흐름’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인 일명 김영란법이 2015년 3월 3일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동월 27일 공포됐다. 김영란법은 2016년 9월 28일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간다.

김영란법이 시행되면 고급 선물로 건네지는 농축산물 소비가 줄어들 것이라는 게 농업계의 우려다.

최대 300만 명이 김영란법 적용 대상자에 들어갈 것으로 추정되는 가운데 이 법이 시행되면 과일류와 화훼, 한우, 굴비 등 주요 농축산물 선물시장에 큰 타격이 우려된다는 것이다.

부정청탁금지법 시행령 농축산물 제외 관철을 위한 집회가

2015년 9월 4일 정부세종청사 앞에서 진행되는 등 농업계 반발이 확산됐고, 국회에서도 농촌 지역구 의원을 중심으로 김영란법에 대한 우려를 표시해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이 발의되기도 했다.

이동필 농식품부 장관도 9월 10일 열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국정감사에서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자체가 지향하는 취지는 공감한다”면서도 “시행 시 농축수산물에 대한 심각한 소비위축을 가져올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장관은 “김영란법 시행령에서는 (허용가능한 선물의) 금액 규모를 정할 수 있는 것으로 안다. 그 부분은 주무부처가 중심이 돼 적극 논의할 것으로 본다”며 “시행령 제정 시 농업계 입장을 충분히 전달해 지나친 피해를 보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이런 농업계의 요구는 수용되지 않고 있다. 한우협회 등이 2015년 10월과 12월, 두 차례에 걸쳐 법 적용대상에서 국내산 농축수산물을 제외시켜 줄 것을 요청하는 탄원서를 국민권익위원회에 제출했다.

권익위는 특정품목만 제외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수용불가 입장을 밝혔다.

김영란법의 시행여부는 아직은 불투명하다. 대한변호사협회 등이 김영란법의 위헌성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청구했고 2015년 12월 10일 이에 대한 위헌 공개변론이 진행됐다.

김영란법의 위헌 여부가 아직 가려지지 않았다. 헌법재판소는 김영란법이 시행되는 2016년 9월 전까지는 위헌 여부를 선고할 방침이다.

## 임업

### ■ 산림 현황

우리나라의 2010년 말 현재 산림면적은 637만ha로 국토면적의 63.7%에 달한다. 그 가운데 국유림은 154만3천ha(24.2%), 공유림은 48만8천ha(7.7%)이며, 사유림은 433만8천ha로 전체 산림면적의 68.1%를 차지하고 있다.

산림비율은 OECD 30개 회원국 중 핀란드(72.9%), 스웨덴(68.7%), 일본(68.5%) 다음으로 높은 수준이다.

산림면적은 2009년에 비해 1천461ha가 감소했는데 그 내용을 살펴보면 도로 1천357ha, 대지 1천130ha, 공장용지 620ha, 농경지 402ha 등으로 나타났다. 2010년 말 총 임목축적은 8억m<sup>3</sup>으로서 ha당 평균 축적은 125.6m<sup>3</sup>으로 2009년에 비해 증가했다.

임상별 산림면적은 침엽수림이 258만1천ha로 전체의 40.5%이고, 활엽수림은 171만9천ha로 27.0%, 혼합림은 186만5천ha로 29.3%, 기타 죽림(竹林)과 무림목지(無立木地)는 20만4천ha로 3.2%를 차지하고 있어 임상별 산림비율은 전년도에 비해 크게 변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나무 나이별(영급별) 산림면적 분포는 30년생 이하는 202만3천ha로 전체 산림면적의 31.8%이고, 31년생 이상은 414만2천ha로 65.0%, 죽림(대나무)·무림목지는 20만4천ha로 3.2%이다.

## ■ 임업 현황

2014년 말 임산물 총생산액은 7조8천159억원으로서 2013년 말 6조9천100억원보다 9천59억원(13.1%)이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2013년 말보다 토석, 용재, 수실류, 버섯, 약용식물 등이 증가했으며 조경재, 산나물 등의 생산액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품목별 생산액 비율을 살펴보면 순임목이 2조5천118억원(32.1%), 토석 1조9천214억원(24.6%), 수실류(밤, 잣, 대추, 호두 등 포함) 8천599억원(11.0%), 조경재(조경수, 분재, 야생화 포함) 6천379억원(8.2%), 약용식물 5천104억원(6.5%), 용재 4천842억원(6.2%), 산나물 3천697억원(4.7%), 버섯류(표고, 송이 등) 2천42억원(2.6%) 순인 것으로 나타났다.

### ① 순임목(純林木)

순임목생산액은 한 해 동안 산에서 자란 나무의 순생장량에 대한 화폐 가치를 내부투자이익을 방법에 의해 산출한 것으로 2010년도 순임목생산량은 3천701만2천㎡이며 이를 금액으로 환산한 결과 2조5천118억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러한 성장량 증가는 우리나라 산림 자원량의 증가를 뜻하고 기후변화협약과 관련한 탄소배출권 확보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하게 될 것이다.

### ② 조경재

조경재는 조경수, 야생화, 분재를 포함하며 2014년 총 생산액의 8.2%를 차지하고 있다. 2014년 생산액은 6천379억원으로 전년대비 16.5% 감소했으며 품목별로는 조경수가 5천921억원으로 단일품목으로는 가장 생산규모가 크고 야생화 354억원, 분재 104억원 순이다.

### ③ 수실류(樹實類)

임산물 생산조사 조사대상의 수실류는 밤, 호두, 대추, 잣, 도토리, 은행, 산딸기, 뽕은 감, 머루, 다래, 산초, 제피 등으로 2014년 수실류 생산액은 8천599억원으로 전년도보다 19.8% 증가했다.

주요 품목별 생산량은 밤 5만9천465t, 뽕은 감 19만7천906t, 대추 1만4천236t, 잣 7천86t, 호두 1천123t으로 나타났다.

### ④ 버섯류 및 산나물

주요 버섯류는 송이를 비롯해 표고, 목이버섯 등으로 2014년도 총생산량은 1만9천987t, 생산액은 2천42억원으로 전년대비 생산량은 1.0%, 생산액 3.7% 모두 증가했으며 품목별 생산량은 표고가 1만9천399t(건표고 943t, 생표고 1만8천456t), 송이 89t, 기타 버섯 4990t 생산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생산액은 표고가 1천861억원, 송이 128억원, 기타 버섯이 54억원으로 조사됐다.

한편, 산나물류는 생산량은 전년대비 3.3%가 증가한 4만338t이 생산됐고, 생산액은 전년도보다 0.6%가 감소한 3천697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 ⑤ 용재(用材)

2014년 용재 생산량은 519만㎡이며 생산액은 4천842억원으로

로 전년대비 생산량은 35.5% 증가, 생산액 또한 24.1%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⑥ 토석

2014년 토석의 생산량은 2억735만3천㎡, 생산액은 1조9천214억원으로 2013년 자료와 비교 시 생산량은 68.3%, 생산액은 66.9%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 ■ 산림정책 동향

산림자원의 육성은 산림정책의 근간으로서 2015년 2월 하순부터 4월까지 나무심기 기간을 설정하고 시민을 대상으로 나무 나눠주기, 내나무 심기, 나무시장 운영 등 내나무 갖기 캠페인을 펼쳐 국민 참여를 유도하는데 주안점을 뒀으며 2015년에 전국적으로 2만3천ha에 5천72만 그루를 식재했다.

산림 탄소흡수원 확충은 물론 일자리 창출 측면에서도 중요성이 있는 1단계 숲가꾸기 5개년 계획(2004~08)과 기후변화 대응 측면을 강화한 2단계 숲가꾸기 5개년 계획(2009~13)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으며, 2014년부터는 기능별 산림관리를 바탕으로 한 3단계 숲가꾸기 5개년 계획(2014~18)을 수립해 추진하고 있다.

국제산림인증기구의 산림인증은 지속 가능한 산림경영을 위한 글로벌 스탠더드로서 국내에서도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산림청에서도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을 기본으로 하는 산림기본법을 2001년부터 제정해 시행하고 있으며, 국유림을 중심으로 국제적 기준의 인증시스템을 적용해 점차 확대하고 있다.

세계적으로 약 4억5천만ha에 달하는 산림면적이 국제인증기관에 의해 산림인증을 받았으며 우리나라는 2006년도에 제주도 소재한 국립산림과학원 난대·아열대산림연구소 시험림 2천741ha와 강원도 홍천 소재 국유림 3만3천898ha를 시작으로 2015년 말 현재 국유림 38만ha(8개소)에 대해 FSC 산림인증을 받았다.

특히, 2015년부터는 한국의 산림현실에 적합하고 국제적으로 통용가능한 한국형 산림인증제도의 도입을 추진하고 있으며, 2016년부터 본격적인 인증사업과 함께 한국형 산림인증제도에 대해 국제상호인정을 신청할 계획이다.

### • 기후변화 대응 탄소흡수원 관리강화

기후변화와 관련한 대응책 논의에서 산림은 기후변화협약에서 인정된 핵심 '흡수원(sink)'이라는 측면에서 중요성이 있으며 실제로 우리나라의 산림은 2013년 기준 4천700만 톤의 이산화탄소(CO<sub>2</sub>)를 흡수하고 있다.

산림청은 기후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2013년 2월 23일 시행했으며 이 법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2014년 제1차 탄소흡수원 증진 종합계획(2015~19)을 수립했다.

기후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먼저 탄소흡수원을 신규로 조성하거나 기존 산림의 흡수 능력을 숲 가꾸기 등으로 증진해 주어야 한다.

아울러 목제품 사용 및 산림바이오매스 에너지의 사용을 늘

려 1회적인 소비가 아니라 생산-소비-재생산으로 이어지는 탄소순환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이를 위해 우선적으로 숲 가꾸기 산물 수집을 2014년의 48만㎡에서 2015년도에는 36만㎡으로 감소했으나 2016년도에는 63만㎡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목재팔레트 지급을 위해 2008년 말부터 산림조합 목재유통센터(여주)에 국내 최초의 목재팔레트 제조시설을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추가로 공모를 통해 2009년 4개소, 2010년 8개소, 2011년 3개소, 2012년 1개소 설치를 지원해 국내에는 정부지원 17개소를 포함한 총 21개소의 목재팔레트 제조시설이 설치·운영 되고 있다.

한편, 목재팔레트의 안정적 공급과 연계한 목재팔레트 수요를 확대하기 위해 2009년부터 농산어촌 주택, 주민편의시설, 산업체 등에 목재팔레트 보일러를 지속적으로 보급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수요 확충과 더불어 RPS(Renewable energy Portfolio Standards) 제도 시행 등에 따라 2011년 6만에 불과했던 목재팔레트 소비량이 2012년 17만, 2013년 55만으로 급격하게 증가했으며 2014년부터는 100만을 넘어서 190만을 소비했고 2015년에는 저유가 영향으로 다소 감소된 155만의 소비량을 기록했다.

해외 산림자원 개발은 1993년 인도네시아에 처음으로 해외 조림사업에 진출한 후 2013년 말까지 총 14개국에 34개 업체가 진출해 40만ha의 해외조림을 실시했다.

우리나라는 1987년 한·인도네시아 임업위원회를 시작으로 2014년 말까지 캄보디아, 미얀마, 러시아, 브라질, 칠레, 에티오피아, 아르헨티나, 라오스 등 총 30개국과 산림협력관계를 맺고 있다.

이러한 양자 간 산림협력관계를 바탕으로 2007년부터 몽골의 사막화 방지를 지원하는 몽골그린벨트 조림사업, 중국과 파라과이에 우호의 숲 조성, 인도네시아 산림협력센터 운영 등 협력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향후 개도국에 대한 산림협력 ODA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한편, 산림분야에서 우리나라는 '한·아세안 산림협력협정' 체결을 주도하고 이를 통해 산림을 활용한 지역단위 실행 기구로서 아시아산림협력기구(AFoCO) 확대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아시아산림협력기구(AFoCO)는 개도국과 선진국 간에 기후변화 등 지구촌 환경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가교역할을 하는 기구로서 과거 산림황폐화를 경험한 우리나라가 토지황폐화, 산림파괴 문제를 겪고 있는 아시아의 국가들에게 우리의 녹화 성공사례를 전파함과 동시에 관련 정책과 기술 등의 노하우를 공유함으로써 한국의 녹화 성공 경험을 아시아 국가에 전수할 수 있는 역할을 하고 있다.

또한, 2011년 10월에는 유엔사막화방지협약(UNCCD) 제10차 당사국 총회(경남 창원)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고 의장국인 우리나라가 '창원이니셔티브'를 제안해 협약 이행을 위한 새로운 추진 동력을 제공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창원이니셔티브는 협약 이행을 지원할 과학기반조성과 사막화·토지황폐화 및 가뭄 피해 국가들에 대한 지원을 위해 동북아 DLDD 네트워크 운영, 아프리카 및 중남미 지역 건조지 녹화사업 등 파트너십 구축, 지속가능한 토지관리를 위한 생명

의 토지상 제정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로써 우리나라는 글로벌 DLDD(사막화와 토지황폐화 및 가뭄) 이슈에 대한 국제기구 내에서 입지를 확고하게 해 국제산림논의에서 DLDD 피해 저감을 위한 노력을 수행하고 있다.

#### • 임업인 소득증대

임업소득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밤 산업 육성을 위해 밤나무 집약관리를 목표로 노령목 갱신, 저수고 재배, 토양개량 등의 세부사업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우리나라 밤나무는 대부분 1970년대 전후에 식재돼 밤나무림의 노령화가 진행되고 이로 인한 품질저하 및 수확량 감소 현상이 나타나고 있어 2010년부터 경제성이 없고 방치상태에 있는 밤나무 재배지에 고소득 대체작목(수실류 등) 조성비를 지원하는 등 4만ha 수준의 재배면적으로 유지할 계획이다.

표고버섯의 경우에는 세계적인 추세인 원목재배에서 톱밥재배로의 자연스러운 전환을 위해 2015년까지 표고톱밥배지센터 45개소 조성 및 표고톱밥재배 농가보급형 모델개발을 추진했으며,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종균의 개발 및 경영컨설팅 등 기술보급을 위한 지원도 강화하고 있다.

이외에도 산양삼, 송이, 호두 등 소득 잠재력이 높은 임산물을 지원하기 위한 생산기반시설 확대가 이뤄지고 있다.

#### •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 증진

기후변화 협약 이행(탄소저감) 및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목재이용 증진과 국산재의 지속적인 공급확대를 위한 법률적 뒷받침 마련이 절실히 요구돼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을 2013년 5월 23일 시행하게 됐다.

법률적 기반을 바탕으로 ①지속가능한 목재이용 종합계획 수립 ②목재이용위원회 운영 및 목재문화진흥회 설립 ③목재생산업 등록제도 정착 ④목재제품 품질관리 및 사법 경찰권 운영 제도 도입 등 다양한 분야에서 많은 성과를 거뒀으며 이를 통해 목재이용을 활성화하고 목재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기반이 마련됐다.

또한, 2015년부터는 한·중 FTA 체결에 따라 도산 위기에 처한 국내 목재산업체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노후된 재제·방부·건조시설 등의 '목재산업시설 현대화 사업'을 지원하는 한편, 목재문화체험장 조성 확대(9~15개소), 생활 속 목재문화 활성화를 위한 '나무누리 축제' 최초 개최 등 목재이용 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 • 산림 문화·휴양 서비스 다각화

산림휴양시설 확충 및 서비스 강화를 위해 2015년까지 산림휴양시설 362개소(자연휴양림 165, 산림욕장 194, 산림생태문화체험단지 3)를 조성했다.

또한, 산림이 지닌 치유기능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산림치유 프로그램의 운영이나 산림치유 활동을 지도해 줄 전문 인력인 산림치유지도사 양성제도를 운영해 2015년까지 350명의 산림치유지도사를 배출했으며 국민 건강증진을 위해 경기 양평, 전남 장성, 강원 횡성에 치유의 숲을 운영하는 등 산림치유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다.

최근 모지로 인한 산지훼손을 막고 화장 위주의 장묘문화

확산에 대응하고자 경기도 양평에 국립수목장림을 운영하고 있으며 건전한 장례문화 확산을 위해 2014년에는 수목장림 활성화 대책을 수립해 수목장림 시설확대 및 제도개선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2015년 중부권 제2수목장림 조성을 위한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2016년부터 본격적인 조성을 추진할 예정이다.

2012년 '산림교육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서 국민이 산림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습득하고 가치관을 가지도록 산림 교육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2013년 산림교육종합계획을 수립해 산림교육센터·유아숲 체험원 조성·운영, 산림교육전문가 양성, 프로그램 개발·인 증 등 산림교육 인프라를 확충하고, 교육부, 여가부, 법무부 등 부처 간 협업을 통해 산림교육 활성화에 이바지하고 있다.

2007년부터 지리산둘레길을 시작으로 DMZ트레일, 한라산둘레길, 속리산둘레길, 낙동정맥트레일, 백두대간트레일 등 트레킹길을 조성하고 있으며 앞으로 5대 트레일과 5개 명산 둘레길을 중심으로 전국 숲길네트워크 기반구축을 통해 다양한 형태의 산행문화 향유와 산림의 보전적 활용을 도모할 계획이다.

또한 기존의 정상정복형 단순한 산행형태보다는 숲길과 지역의 역사·문화·생태자원을 연계해 누구나 편리하고 안전하게 걸을 수 있는 체험형 걷기문화를 창출하기 위해 수평적 개념의 트레킹길을 2021년까지 7천614km를 조성할 계획으로 숲길의 조성·관리 기본계획(2012~21)을 수립해 기반을 조성하고 있다.

아울러 쾌적한 등산 환경 조성을 위한 등산로 정비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2015년까지 총 9천526km의 훼손 등산로를 정비했고 산행문화 지원 사업 및 산악사고에 대비한 민·관 산악구조대 27개 747명을 편성·운영하고 있다.

산촌지역에 풍부한 산림휴양 및 소득자원을 활용해 산촌주민의 소득증대 및 산촌 활성화를 위해 산림청에서 1995년부터 추진해온 산촌 생태마을 조성사업은 2010년까지 240개소의 조성을 완료했으며 2009년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에 따라 2010년부터는 농림축산식품부의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으로 통합돼 운영되고 있다.

또한 산촌 주민 역량강화를 통한 산촌 생활환경 개선 및 소득증대를 위해 산촌마을컨설팅, 주민현장학교 및 활성화 공모사업 등 산촌 활성화 사업을 2014년부터 추진하고 있으며 산촌진흥기본계획 수립을 위해 2014년 전국산촌 기초조사를 추진했다.

#### • 산지의 계획적 보전·이용체계 구축

제1차 산지관리기본계획 수립(2013년 4월)으로 국토·환경계획 등과 연계해 산지를 체계적으로 보전·이용하기 위한 중장기 비전과 목표를 제시하고 산지관리의 주도적인 공간계획 및 전략을 수립했으며 산지관리 기본계획과 연계한 시·도별 산지관리지역계획을 수립해 체계적인 산지관리 기반을 마련했다.

또한, 사회여건 변화에 따른 선제적 산지제도 개선을 위해 2013년부터 매년 산지분야 제도개선 공모제를 실시하고 제도개선 사항을 발굴해 정책에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 전문가 등이 지적했던 평균경사도 조사방법의 표준화 등 제도개선을 통

한 신속한 정책환류를 통해 산지분야 신뢰성을 강화했다.

아울러 박근혜 대통령 주재 무역투자진흥회의 및 총리 주재 규제개혁장관회의 등의 안건으로 제안된 보전산지 편입제한 및 연접개발제한 폐지 등 산지분야 입지규제 개선을 성공적으로 완료했으며, 2015년도는 임산물재배 규제 완화 등 임업인의 산림경영 지원을 위한 규제 합리화도 집중적으로 추진했다.

이를 통해 새 정부 출범 이후 범정부적인 투자활성화 정책 기조에 부응하는 산지정책 추진으로 주도적인 입지규제 개선을 통해 원주 내이처관광단지 등의 경우 1천908억원의 투자가 가능해졌고 풍력발전시설의 경우 1개 단지 당 500억~750억원의 투자유발 효과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게 됐다.

이와 함께 생태적인 산지이용 수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생태적 산지이용' 체계를 마련해 그 동안 '고밀도 개발(산지전용 가능산지)'과 '절대보전(산지전용 불가능산지)'의 이분법적으로 관리해오던 산지이용 체계를 '고밀도 개발(산지전용 가능산지)', '저밀도 이용(생태적 이용 가능 산지)', '절대보전(산지전용 불가능산지)'으로 세분화해 새로운 산지관리 패러다임을 도입했다.

산지분야 학계, 단체, 기관 등 산지관련 전문가 인적네트워크인 '산지포럼' 운영의 활성화도 또 하나의 성과로 평가되고 있다.

#### • 산림재해의 철저한 방지

흔히 산불, 산림병해충, 산사태를 3대 산림재해로 지칭하곤 한다. 2015년은 기후변화로 인한 가뭄 지속, 산림 내 연소물질 축적, 휴양인구 증가 등으로 산불발생 위험도가 상승했다.

설 연휴(2월 18~22일), 석가탄신일 연휴(5월 23~25일) 등 봄철 휴일 장기화와 등산·휴양객 증가로 동시다발 산불 발생 위험도가 증가해 산불발생 건수가 최근 10년 평균(384건) 대비 62%가 증가했다.

그러나 과학적 자료에 근거한 맞춤형 취약지 관리와 초동대응 강화로 피해 면적(418ha)은 최근 10년 평균(631ha) 대비 34% 감소하는 성과가 있었다.

건조일수 당 산불 피해면적은 예년 평균 5.9ha에서 2015년 3.5ha로 줄인 데는 전국산불진화합동훈련 등 다양한 현장여건에 맞는 지상·항공진화 역량을 강화하고, 산림헬기 및 유관기관 지원헬기의 공조강화, 한정된 산불대응 인력(2만3천 명) 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빅데이터 분석, ICT 기반의 체계적인 산불감시와 상황관리를 통한 산불방지 태세 강화가 주요했다.

또한, 제6차 세계산불총회(2015년 10월, 평창)의 성공적인 개최를 통해 산불관리와 지속가능한 발전을 목표로 하는 '평창선언'을 채택하는 등 우리의 앞선 산불관리기술을 바탕으로 산물 분야에 있어 국제협력을 선도했다.

앞으로도 선택과 집중의 산불정책 추진으로 산불피해를 최소화할 것이다.

2013년 여름철 이상고온 등 기후변화로 소나무재선충병이 전국적으로 확산됐으나 민·관·군 연인원 73만 명이 방제작업에 참여해 2013년 재선충병 피해목 218만 그루를 매개충(솔수염하늘소) 우화기 이전(4월)까지 전량 제거했다.

재선충병 피해목 방제 후 피해확산 방지를 위해 매개충 활동기(5~8월)에 항공·지상방제를 확대(3~5회, 3만6천→8만



2천ha)했으며 2014년도 소나무재선충병 피해목 전수조사 결과 109만 그루로 예측됨에 따라 2015년 4월까지 전량 방제해 2017년 소나무재선충병 완전방제를 달성할 계획이다.

기후변화로 인한 병해충 확산, 외래병해충 유입 등으로 산림뿐만 아니라 생활권에서도 산림병해충 피해가 증가됨에 따라 공군기지, 수출입항구, 문화재보호구역 등 공동협력방제를 지속 추진하고 있으며 민간컨설팅 확대(4천 건), 수목진단센터(7개소), 국·공립나무병원(12개소) 등 생활권 수목진료체계를 구축했다.

소나무재선충병 등 산림병해충에 대한 적극적인 예찰 및 방제의 추진으로 2014년 산림병해충 발생면적이 전년 대비 10% 감소하는 등 산림병해충으로부터 산림생태계 피해 최소화 및 국민행복 만족도 제고에 기여하는 계기가 됐다.

2015년 산사태 방지는 국민안전에 역점을 두고 인명피해 우려지역 위주로 사전 점검·정비 및 주민대피체계를 구축하고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사방사업을 우선 시행해 1992년 이후 23년 만에 산사태 무재해를 기록했다.

앞으로도 산사태취약지역을 중심으로 예방사업 시행, 신속한 주민대피체계 구축 등 집중 관리함으로써 산사태로 인한 국민의 재산 및 인명피해를 최소화할 것이다.

#### ■ 임업선진국 수준으로 국유림 확대

2015년에는 사유림 8천271ha를 매수했으며 2016년에는 8천1ha를 매수할 계획이다. 사유림 매수는 산림의 공익기능 증진, 안정적인 탄소흡수원 확보, 산림생태계 보전 등을 위해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다.

그동안 관리가 잘 안 되는 사유림을 적극적으로 사들여 체계적이고 지속 가능한 산림경영 관리를 실현할 목적으로 국가직영임지를 확보하는 데 주력해 왔다.

수도권 주민 상수원을 보호하고 소양강댐 탁수 유입을 줄이려고 소양강댐 상류지역, 백두대간보호지역 내 토지를 사들여 산림으로 복원하고 있다.

유네스코가 지정한 세계자연유산으로 등록된 한라산 주변에 분포하는 희귀 자생식물 등 다양한 생물종을 보호하기 위해 제주지역 지하수의 원천으로 여겨지는 곳자왈 지역을 2009년부터 438ha를 매수했으며 2016년에도 60ha를 매수할 계획이다.

## 해양수산

### 해 양

#### ■ EU·미국 불법조업국 지정 해제

미국과 유럽이 각각 우리나라를 예비 불법 어업(IU·Illegal, Unreported, Unregulated)국가에서 지정 해제했다.

미국 해양대기청(NOAA)은 2월 우리나라의 불법어업 근절 노력과 개선조치를 고려해 예비 불법어업국 지정해제를 해제하는 내용의 최종보고서를 발표했다.

미국은 2013년 1월 우리나라 어선이 남극 수역에서 한 불법

조업과 이에 대한 우리 정부의 제재 수준을 문제 삼아 예비 불법어업국으로 지정했다.

불법조업국으로 최종 지정됐을 경우 매년 2억 달러 수준인 우리 수산물의 미국 수출이 금지되고 우리 선박의 미국 항구 이용이 금지되는 만큼 해수부는 지정해제를 위해 원양산업발전법 개정 등의 노력을 했다.

또 불법조업 감시를 위한 어선위치추적장치(VMS) 설치, 조업감시센터(FMC) 운영, 미국 측과 5차례에 걸친 양자회담 등을 통해 교섭해왔다.

미국의 IU어업국 지정해제로 불법어업국으로 최종 확정시 받게 됐을 국가 이미지 훼손은 물론 수산물 수출금지 등의 불이익이 완전 해소됐다. 이어 4월에는 유럽연합(EU)이 한국에 대한 예비 불법어업국 지정을 해제했다.

EU 집행위원회는 4월 21일 발표한 성명에서 한국의 불법 조업 감시체계 구축 등의 제도개선 노력을 긍정적으로 평가해 한국을 예비 IU 국가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했다.

이로써 한국은 불법어업국 지정에 따르는 EU의 제재를 피할 수 있게 됐다. EU가 2013년 11월 우리나라를 예비 불법어업국으로 지정한 지 1년 5개월 만이다.

EU는 한국 원양어선이 서아프리카 수역에서 불법어업을 일삼고, 정부가 불법어업 처벌 체계를 제대로 갖추지 않았다는 이유로 한국을 예비 불법어업국으로 지정했다.

EU로부터 불법어업국으로 최종 지정되면 해당국 수산물의 EU 지역 수출금지, 해당국 선박의 EU 항구 이용금지 등의 제재가 이뤄진다.

불법어업국 지정 시 국가 위상 훼손, 수산물 수출 금지 등으로 발생하는 경제적인 손실이 연간 약 1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해양수산부는 추산했다.

정부는 EU 예비 불법어업국 지정 후 불법어업 근절을 위해 원양산업발전법을 2차례 개정하고, 모든 원양어선에 어선위치추적장치(VMS)를 설치해 동향을 실시간으로 감시하는 등 노력을 기울였다.

또 연안국, 국제 비정부기구(NGO) 등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서부 아프리카 수역 원양어선 감척사업도 추진했다.

#### ■ FAO 세계수산대학 국내 유치 청신호

정부가 2017년 개교를 목표로 설립을 추진해온 유엔식량농업기구(FAO) 세계수산대학 국내 유치에 청신호가 켜졌다.

FAO 세계수산대학은 국제해사기구(MO) 세계해사대학을 벤치마킹해 개발도상국 등의 수산 인력을 대상으로 수산·양식 분야 전문 지식을 교육하는 석·박사 학위과정 고등교육 기관이다.

해양수산부와 FAO는 9월 14일(현지시간) 이탈리아 로마 FAO 본부에서 'FAO 세계수산대학 설립을 위한 상호 협력의향서(LOI)'를 체결했다.

앞서 해수부와 FAO 사무국은 2014년 1월 수산양식 연구 및 역량구축 분야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세계수산대학 설립에 협력하기로 했다.

협력의향서에는 양해각서를 바탕으로 한국이 2015년 9월 말 제출하는 세계수산대학 설립제안서를 12월 이사회에 상정